

이용섭의원 201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1

공공기관 선진화 3년 평가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섭
(광주 광산구을)

발 간 사

이명박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조 하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정치권, 시민단체, 언론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령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에 대해서 정부는 선진경영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주식매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성장잠재력이 많은 공기업주식을 지금 매각해서 국부만 유출하고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로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국가발전에 도 기여하면 좋겠습니다만, 그 성과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3년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평가를 해보았더니 정부가 성과달성에만 급급해 공공기관 선진화가 오히려 공공기관 부실만 초래하고 있고, LH공사와 같이 무리하게 통폐합한 결과 국민

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는 결국 이명박정부가 가장 실패한 정책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국민여러분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참된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2011년 10월

민주당 국회의원 이 용 섭

<목 차>

1. 서 론	1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 및 현재상황	2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	2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6
3. 공공기관 선진화 3년 성과 평가	14
(1)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심각, 과거정부보다 크게 증가.	14
(2)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07년 52조원→ '11년 72조원으로 20 조원 증가시켜 국민 부담 가중	15
(3)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부채급증 → 국민손실 확대	16
(4) 무모한 주식매각 추진으로 부실 예산편성 초래, 국부유출 우려	18
(5) 1년만에 다시 증원으로 돌아선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전형 적인 막무가내행정, 전시행정, 탁상행정	20
(6) 효율성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인 공공성을 크게 훼손	21
4. 결 론	23

1. 서론

- 이명박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때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핵심공약으로 하여 '08.8~'10.4까지 6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정부는 선진화 정책 3년을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면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통해 하드웨어(H/W)적인 구조조정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보수체제 합리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등 소프트웨어(S/W) 측면의 개혁도 적극 추진하였다. 공공기관들도 경영 비효율을 제거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이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외형적인 구조조정을 넘어 노사문화를 상당히 개선하고 보수체제 합리화를 통해 내부체제 개선으로 확산시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라면서 선진화 정책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공공기관의 임금삭감과 복지후생비 감소를 제외하면 공공기관 선진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크게 미약한 실정이고, 이명박정부가 임기내에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문제 제기도 많음.
- 또한 정부가 내세운 공공기관 선진화 달성과제를 잘 수행했는지는 몰라도, 그 결과 공공기관이 부실해졌거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는 지적 또한 많은 실정임.
-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한 지 3년이 지난 오늘날

‘공과 사’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가 국민에게 득이 되는지 혹은 해가 되고 있는지 밝힐 필요가 있음.

- 이에 공공기관 선진화를 임원인사, 정부지원금, 통폐합, 민영화(주식매각), 인원감축,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6개 부문을 나누어 그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 및 현재상황

(1)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정

- 이명박정부는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 부터 공공기관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였음.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 백서(2008.3)-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감시와 견제의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불리며 방만한 운영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됐다. 참여정부 5년간 45개 공공기관이 신설됐고 인력은 2만 7천 7명이 증가했다. 공기업의 이윤은 줄어들었음에도 직원과 부채 규모는 동시에 늘어나는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8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2006.10),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존립근거는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장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 이양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태어나야한다. 시장경쟁 여건이 성숙된 분야는 민영화하고, 민영화에 따른 보완

대책을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관으로 존치하는 경우에도 코드인사 연결고리를 해체하고 성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대한 정치권과 기득권 집단의 저항극복을 위해 대통령실에 ‘공공기관경영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08.8.11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원칙으로 “첫째,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전환, 둘째, 국민 편익 증대, 셋째, 사회적 비용 최소화, 넷째,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선진화 방안을 투명하게 추진한다.”는 4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08.8~’10.4까지 6차례에 걸쳐서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였음.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주요사항 을 보면 공공기관 구조개혁과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공공기관 구조개혁
 - 민영화 및 지분매각·통폐합·기능조정 계획 수립 (1~3차, ‘08.8~10)
 - 민영화·지분매각(24개) : 민영화(자산신탁 등 19개), 지분매각(인천공항 등 5개)
 - 통폐합(41개) : 통합(주공+토공 등 36→16개), 폐지(노동교육원 등 5개)
 - 기능조정(22개) : 비핵심기능 축소(관광공사 등), 4대 사회보험징수 기능 통합 등

- 129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 계획 수립 (4차·6차)
 - 정원감축(△2.2만명, △12.7%), 예산절감, 유휴자산 매각 등
 - * 4차('08.12.22) : 69개 기관, 6차('09.3.30) : 60개 기관
- 131개 출자회사에 대한 정리계획 수립 (5차, '09.1)
 - * 지분매각(111개), 폐지·청산(17개), 통폐합(3개)

□ 공공기관 보수체제 등 선진화

- 공공기관 임직원 보수체제 합리화 추진
 - 기관장·감사 보수체제 개편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시달('08.6)
 - * 기관장 기본연봉은 차관급(10,754만원), 감사는 기관장의 80%로 하향조정
 - 공공기관의 대졸초임 인하 권고('09.2), 금융공공기관(9개)의 기존 직원 보수 삭감 추진('09.10~12), 성과연봉제 표준모델 권고('10.6)
- 노사관계 선진화 : 단체협약 공시, 불합리한 단협 개선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주요내용>

	주요내용	세부 내용
1차 (‘08.8.1 1)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 기업은행, 기은캐피탈, 기은신용정보, IBK시스템 ▪ 인천국제공항공사(49%) ▪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등 14개 공적자금투입기관 ▪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공사, 건설관리공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사, 토지공사
	기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공사 ▪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 국민체육공단 ▪ 전기안전공사

	주요내용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기술시험원 ▪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p style="text-align: center;">2차 (‘08.8.26)</p>	<p style="text-align: center;">민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공항공사 		
	<p>통합</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기획평가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1) ▪ 에너지(1) ▪ 중기정책(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재단(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사회(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관리(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기술(1)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재의료원 </div>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1)

	주요내용	세부 내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저작권위원회</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div>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저작권(1)</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한국청소년수련원</div>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한국청소년진흥센터</div> ⇒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청소년 진흥(1)</div>
	폐지	▪ 정리금융공사, 한국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기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축소: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 R&D관리기능 이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3차 (‘08.10. 10)	민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 대한주택보증(주) ▪ 88관광개발(주)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농지개량(주) ▪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레일전기(주)+코레일트랙(주)+코레일엔지니어링(주) ▪ 코레일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폐지	▪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경쟁도입	▪ 한국가스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기능조정	▪ 한국가스기술공사(주)
	경영효율 화	▪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5),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4차 (‘08.12. 12)	기능조정 및 정원 감축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 10조원 수준의 재무건전성 확보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 연봉제 도입유도, 퇴출 프로그램 도입

	주요내용	세부 내용
	조직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만 경영요인 지속 점검·제거하여 효율성 제고
5차 (‘09.01. 15)	매각 등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수행이 바람직→지분매각(111개, 3조436억원) 설립목적 달성 및 경영부실 누적→폐지·청산(17개, 742억원) 별도 존치 불필요→모기업에 흡수·통폐합(3개, 27억원)
	존치되는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에서의 사업수행(64개, 1조346억원) 혁신형·기술형 중소기업 육성(6개, 145억원) 분사, 한시적 운영회사 설립(7개, 16억원) 민자유치(60개, 9,526억원) 투자협약상 매각 및 사업철수 제한(5개, 7,140억원)
	제도개선을 통한 출자회사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회사 신설시 협의해야 하는 대상 확대 기출자 회사에 대한 출자금 확대 억제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출자회사 관리부분 평가 강화 경영공시 강화를 통한 외부감독
6차 (‘10.03. 31)	기능·정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과 경합하거나 민간 수행기능은 폐지·축소 또는 민간위탁(29건, △517명) 업무량 줄어든 기능, 비핵심 기능의 폐지·축소(39건, △487명) 업무프로세스 개선, 유사·중복기능 조정(73건, △922명)
	자산매각 및 예산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매각: 총 37건, 565억 원 예산절감: 1,300억원 이상
	운영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제·임금피크제·성과관리시스템 구축

(2)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현황

□ 정원감축, 기관 통폐합 등 경영효율화를 정부발표 계획대로 완료되었고, 민영화 및 출자회사의 경우 계획대비 추진이 미흡한

수준임.

- 정원감축 : △26.3천명(경영효율화: △22.3천명, 추가효율화 △0.8천명, 통폐합 △3.2천명)
- 통합 : 36→16개, 폐지 : 5개
- 민영화 : 7개 / 출자회사 정리 : 80개('11.7월말)
- 공공기관 보수수준을 하향조정하고, 간부직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음.
 - 기관장 기본연봉을 차관급 수준으로 하향조정(△20.0%, '08.6), 252개 기관 대졸초임 인하(△15.3%, '09.2), 10개 금융공공기관 직원 보수삭감(△5%)
 - 성과연봉제 도입대상 공기업, 준정부기관(100개) 모두 도입 완료('11.4월)
- 이중 공공기관 통폐합 현황,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기능조정, 경쟁도입, 정원감축 등으로 나누어 '11.8월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공공기관 통폐합 현황

- (통합) 중복·유사 기관은 통합하여 단일 통합조직으로 개편하였고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선진화 계획상 36(→16)개 대상기관 모두 통합 완료('10.8.18)

<공공기관 통합 현황>

통합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일자
코레일테크	코레일트랙 + 코레일전기 + 코레일엔지니어링	'09.1.29

통합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일자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09.1.29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9.4.8
한국콘텐츠 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 문화콘텐츠센터)	'09.5.1
에너지기술 평가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09.5.4
산업기술 진흥원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R&D) (+디자인진흥원+생산기술연구원)	'09.5.4
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정보화 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9.5.22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09.6.26
한국인터넷 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09.7.23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09.7.23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9.8.24
토지주택공사	주택공사 + 토지공사	'09.10.1
한국환경공단	환경자원공사 + 환경관리공단	'10.1.1
한국청소년	한국청소년수련원	'10.8.18

통합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일자
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산재의료원	'10.4.28
16개	36개	-

(폐지) 선진화 계획상 5개 대상기관 모두 폐지 완료

- 정리금융공사('09.12월), 노동교육원('09.3월), 코레일에드컴('09.3월), 부산항부두관리공사('09.6월), 인천항부두관리공사('09.6월)

②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선진화 계획상 공공기관 주식매각 대상 24개 기관중 7개 기관 매각완료

매각·상장 완료기관(7개)

- 농지개량('09.8), 그랜드코리아레저('10.12), 지역난방공사('10.1), 안산도시개발('09.10), 한국전력기술('09.12), 한국자산신탁('10.3), 한전KPS('10.12)

남아있는 기관(17개) 및 향후계획

- 인천공항공사 : 국회 계류중인 공사법 개정을 위해 노력
- 산업은행(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포함)·기업은행(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포함) : 금융위와 협의, 구체적인 민영화 계획을 수립
- 뉴서울CC, 88CC : 금년말까지 자체매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매각을 위탁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 한국토지신탁, 한국공항공사, 한국건설관리공사, 경북관광개발공

사, 인천종합에너지, 기업데이터 : 자산평가, 매각공고 등 매각 절차 진행

- 대한주택보증(주) :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연기

③ 공공기관 출자회사 정리현황

□ 선진화 계획상 공공기관 출자회사 131개 기관 중 80개 정리완료, 51개 기관 미정리

□ 정리완료된 출자회사 명칭 및 완료일자(80개)

출자회사	매각일자	출자회사	매각일자
공항주차서비스	09.5.29	옴니시스템	09.5.7
SKY72	09.8.12	로보스타	09.10.26
K종합서비스	09.12.23	미래세움	09.12.31
철도산업개발	11.5.25	와이어투와이어 커뮤니케이션	
한국항만기술단	09.12.24	이피에스솔루션	09.12.8
SKCTA(내트럭)	10.12.10	현대단조	09.10.30
제주관광공사	10.12.2	에스피텍	09.8.31
대한송유관공사	09.12.30	디에스케이	10.12.24
케이오엘	09.12.28	메디엔인터내셔널	10.6.28
코렐테크놀로지	09.5.8	세양정공	10.12.27
GS퓨얼셀	10.7.12	큐리온	10.12.27
한전산업개발	10.12.16	티벳시스템	10.7.29
진항도동열전유한공사	09.4.24	대봉아크로텍	10.12.27
한국CES	09.9.24	동은단조	10.12.6
서평에너지	10.12	아룽기공	10.11.29
여수페트로	09.10.27	아이케이	10.12.29
STX에너지	10.5.4	어보브반도체	09.6.29
네오그래프	09.9.1	엠씨박스	09.1.30
네츠필	08.11.10	텔레필드	08.4~5

출자회사	매각일자	출자회사	매각일자
마하넷	10.10.20	대창메탈	10.1.11
모닝테크놀러지	10.10.18	한스메이오메드	09.10.9
바로북	10.12.27	유비닉스	09.5.26
빅트레이드	09.10.13	나노신소재	11.2.10
에스티	09.10.7	포테이토벨리	11.2.10
온소리닷컴	09.3.17	유비벨록스(주)	10.7.8
임프레스정보통신	09.11.16	에너지그린	10.6.30
지식정보	10.10.20	무림피앤피	10.6.23
지도	08.12.18	STX팬오션	09.12
청호컴넷	09.4.27	현대유비스	09.12.7
클루텍	09.8.28	캠코SG investors	09.9
헤리트	09.9.8	캠코MS로얄 유동화전문	09.8
케이맥	10.12.29	캠코콜로니 investors	09.9
대한생명	10.3.17	SBS스포츠채널	10.6.10
신한금융지주		하이플러스카드	11.6.10
예한울저축은행	09.9.25	NRC	09.12.29
제주은행	10.11.30	Metropolitan.Co.Ltd	
산업기술인터넷방송국	09.12.29	중앙FMC	09.11.30
한국가스냉열	'08.12.3	부산북항재개발	09.6.9
KEPCO Asia INT'l		일양식품	09.5.27
한전중국국제유한공사		코트렌스	11.7.1

□ 미정리 출자회사 명칭 및 향후계획

○ 미정리 출자회사(51개)

- 나라신용정보, GM대우오토엔테크놀러지, 드림라인, 경춘고속도로, 부산신항만, 휴세스, 제이오, 테라셈, 대정엠텍, 엠아이텍, 명광, 에스제이테크, 에프엔피, 제노텍, 캠프트, 크리눅스, 데모엔지니어링, 티엔엘, YTN라디오, 양산ICD, 경기CES, 일림나노텍,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자산관리, 모닝브릿지 자산관리, 모닝브릿지, 레이크파크, 레이크파크자산관리, 펜타

포트, 펜타포트개발, 충주기업도시, 유네브, 선광종합물류, 크리오텍, 롯데역사, 부천역사, PNCT, KR산업, DB정보통신, KL-NET, LG파워콤, 벅스코, 문경레저타운, 블랙벨리CC, 넥스멘시스템, 디디알소프트, 한국머털테크, 에티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YTN DMB

○ 향후계획

- 매각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독려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출자회사 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
- 특히, 매각이 부진한 출자회사 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매각을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
- * 지난 8.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한송유관공사 등 20개 출자회사 지분매각을 KAMCO에 旣 위탁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자체매각이 어려워 KAMCO 위탁매각이 효율적인 경우 추가적인 위탁매각을 실시할 계획

④ 공공기관 기능조정 현황

- 선진화계획상 20개 기능조정 대상기관 중 12개 기관 완료
- (업무효율성 및 이용편의성 제고 : 10개) 3개 기관의 4대보험 징수통합을 위한 조직 설계가 완료('10.8.17)되어 모두 완료
 - 3개 기관 :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 旣 완료 : 중기 해외마케팅지원 일원화(3개)는 '08년 완료, R&D 기능이관(4개)은 '09년 완료
- (비핵심기능, 수요 감소 등에 따른 기능조정 : 10개) 2개 기관에

서 완료하고, 8개 기관에서 추진중

- 석유공사('08.11), 광물자원공사('09.2) 등 2개 기관 기능축소 완료
- 한국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기능 축소의 경우,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중
 - 정부안 차관회의 통과('11.3.31), 정부안 국회제출('11.4.12)
- 관광공사 골프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센터 등 사업매각의 경우,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속히 매각되도록 추진중
-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가스기술공사, 전기안전공사의 기능조정도 추진중
- 산업기술시험원 정부출연금 축소 및 자체수입 확대도 추진중
 - ('08)661억원 → ('09)704억원 → ('10)751억원 → ('11.3)185억원 ('11년말 862억 목표)

⑤ 공공기관 경쟁도입 현황

- 선진화계획상 2개기관 모두 경쟁도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시장,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 경쟁도입의 경우,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
 - 방송광고공사 : 미디어랩 관련 법안 문방위 소위 계류중('09.12~)
 - 가스공사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지경위 소위 계류중('09.11~)
 -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경쟁도입이 진행되지 어

려운 상황임.

⑥ 공공기관 정원감축 현황

- '08년~'09년에 발표된 선진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원은 '09년 중 감축완료(△2만2천명)하였으며, 초과현원(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을 축소를 계속 추진중.

경영효율화(인력감축) 계획 주요내용

- 4차 및 6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08.12월, '09.3월)을 통해 '09년도에 129개 기관의 정원 17만5천명 중 2만2천명을 감축(△12.7%)
-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1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함

- '11.6월말 초과현원은 1만 6백명이 해소되어 계획의 73.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정원 감축목표 및 초과현원 현황>

단위 : 백명

구 분	효율화 계획시 (A)	'09년말	'10년말	'11.6월말		
				인원 (B)	A-B (C)	해소율 (C/A)
초과현원	145	97	57	39	106	73.0%

- 정부는 초과현원은 정년·명예퇴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소를 추진 중이며, '11.6월말까지 해소현원(1만6백명)의 퇴직유형은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이 큰 비중을 차지

- 퇴직유형별 비중(11.6월, %) : (정년)29.2 (명예)19.8 (희망)14.4 (의원 면직 등)36.6

□ 기관별로 보면, '11.6월말 현재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한 기관은 84개, 초과현원 해소율이 50% 이상인 기관은 33개로 조사

- '10년말 초과현원 해소율이 50% 미만이었던 도로공사 등 18개 기관이 50% 이상의 초과현원 해소율을 달성
- '10년말 초과현원 해소율이 100% 미만이었던 한국전력기술(주) 등 23개 기관이 초과현원을 모두 해소

<초과현원 해소율 현황('11.6월말)>

모두 해소	100% 미만~ 50% 이상	50%미만	합 계
84개 기관	33개 기관	10개 기관	127개 기관
수자원공사, 석탄공사, 기은 등	산업인력공단,한전, 가스공사 등	철도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

- 초과현원 해소율(%) = (감축인원-신규채용)/(계획 당시 초과현원)
- 당초 인력감축 계획 대상기관은 129개이나, 대한에이즈예방협회와 대한결핵협회가 '10년 및 '11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상기관은 127개로 변경

3. 공공기관 선진화 3년 성과 평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 선진화의 추진과제로 내세운 낙하산 인사,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감소, 통폐합, 주식매각 추진, 정원감축, 공공기관 기능 효율화 등 6개 부문에 걸쳐 공공기관의 선진화 3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 오히려 공공기관 선진화가 공공기관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들어났다.

(1)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심각, 과거정부보다 크게 증가.

□ 「이명박대통령 인수위 백서(‘08.3)」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87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06.10),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95명 중 37명이 정치권 또는 관료 출신”이라면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문제로 지적하였음.

□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 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명), 정치권(10명), 관료(40명) 출신이 총 60명(103명 중 58%)에 달해 과거정부보다 소위 낙하산 인사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들어났음.

<10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낙하산 인사 현황>

구 분	기관장 수
계	60명
청와대 및 인수위, 대선캠프 출신	21명
정치권 출신	10명
관료 출신	29명

<첨부> 10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 명단

- (예시) 한국장학재단 이경숙이사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 한국도로공사 장석효사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 팀장
- 에너지관리공단 허종수이사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
- 9.15 정전대란 역시 인맥에 의한 낙하산 인사로 빚어진 직원사기 저하와 내부기강 해이가 주원인
 - 김중겸사장 내정자는 MB와 3중 인연(TK-고대-현대건설 출신)
 - 11개 자회사 경영진과 감사 22명 중 17명이 현대, 대통령인수위, 한나라당, TK, 고대 출신

(2)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07년 52조원 → '11년 72조원으로 20조원 증가시켜 국민 부담 가중

- 정부는 「공공기관선진화 1차계획('08.8)」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절감으로 국민의 부담 경감 - 경영효율성 향상을 통해 재정지원 10% 축소시 연간 약 2조원 절감”이라고 발표하였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2년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07년 52조원에서 '09년 74조원으로 급증하였고, '11년에는 72조 에 달해 '07년 대비 20조원 증가하였음.
-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는커녕 오히려 가중되었음.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금>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07대비'11년 증가액
합계	524,397	581,730	741,122	696,079	723,624	199,227
정부출연금	84,570	91,397	145,538	99,779	110,721	26,151
정부출자금	31,002	53,679	70,170*	43,924	36,038	5,036
정부보조금	69,590	78,936	71,980	76,083	83,544	13,954
부담금및이전수입	75,622	88,426	120,548	134,105	146,777	71,155
위탁및독점수입	263,613	269,292	332,879	342,189	346,543	82,930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09년 정책금융공사 신설시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산은지분을 정책금융공사로 이전출자한 15조원 제외

(3) 무리한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부채급증 → 국민손실 확대

- 정부는 「공공기관선진화 1차계획('08.8)」에서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된 기관을 통폐합”하여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발표, 현재까지 36개 기관을 16개 기관으로 통폐합하였음.
-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통폐합된 공공기관의 경우 총부채는 '07년 72조원에서 '10년 130조원으로 58조원이나 증가하였으며, 평균부채비율도 같은 기간동안 407%에서 1,144%로 늘어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음.
- 특히 LH공사의 경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심의회나 구조조정은 물론 공청회 한번 없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법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작으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켜

탄생한 것이 부실덩어리의 거대공룡 LH공사임

- 부채급증에 따른 신용저하 등으로 시장에서 LH채권이 인수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도 전국 138개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착수 조차 못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감에 따라 해당지역의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음.

□ 앞으로 이들 공공기관이 부실해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통폐합에 따른 부실이 결국 국민혈세로 메워야 될 가능성이 큼.

- (예시) L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에 따라 손실이 생길 경우 적립금,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로도 부족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통합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변화>

(단위: 억원, %)

통합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일자	부채금액(부채비율)		
			'07 ①	'10 ②	증가 ②-①
합계			717,268 (407%)	1,299,951 (1,144%)	582,683 (73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 신재무부원	'10.4.28	2,940 (174%)	4,240 (298%)	1,300 (12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 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9.8.24	2,625 (186%)	1,975 (978%)	-649 (792%)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개발(주) + 코레일네트웍스(주)	'09.1.29	355 (258%)	190 (136%)	-165 (-122%)
코레일테크	코레일트랙 + 코레일전기 + 코레일엔지니어링	'09.1.29	22 (30%)	29 (24%)	7 (-6%)
한국연구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 한국과학재단 + 한국학술진흥재단	'09.6.26	1,552 (414%)	2,301 (4,109%)	749 (3,695%)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진흥원	'09.7.23	183 (53%)	333 (150%)	150 (97%)

통합기관명	통합前 기관명	통합일자	부채금액(부채비율)		
			'07 ①	'10 ②	증가 ②-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교보회	'09.7.23	0 (-)	25 (59%)	25 (59%)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9.5.22	2,061 (198%)	1,356 (138%)	-704 (-5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수련원 + 한국청소년진흥센터	'10.8.18	18 (97%)	46 (99%)	29 (2%)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 방송영상산업진흥원 + 게임산업진흥원 (+ 소프트웨어진흥원 + 문화콘텐츠센터)	'09.5.1	513 (38%)	582 (50%)	69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09.10.1	669,089 (383%)	1,254,692 (559%)	585,604 (176%)
한국환경공단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10.1.1	33,801 (7,307%)	27,292 (2,886%)	-6,510 (-4,4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상품진흥원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09.4.8	469 (-3,910%)	783 (3,741%)	314 (7,65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소 + 부품소재산업진흥원 + 산업기술재단 + 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80%) (+ 전자기술개발사업연구원)	'09.5.4	3,634 (417%)	5,253 (782%)	1,619 (36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평가원 (+ 에너지관리공단 + 한전 + 생산기술연구원)	'09.5.4	8 (48%)	853 (3,156%)	846 (3,109%)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4) 무모한 주식매각 추진으로 부실 예산편성 초래, 국부유출 우려

□ 정부는 24개 기관에 대해 주식매각이나 민영화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 기관의 주식매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4개 기관에 대해서도 자산평가 등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 정부는 '10년 예산(세외수입)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주택보

증, 기업은행 주식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2.7조원을 편성하였으나 세 기관 모두 주식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해 부실예산 편성을 자초함

- 또한 '금년 예산(세외수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기업은행 주식매각에 따른 수입 1.5조원을 편성하였으나 이 역시 주식매각 여부가 불투명하는 등 매년 부실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음
 -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정부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주식매각을 연기하면서 2010년에 주식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예산 편성부터 하였음, 이는 명백히 국회무시태도이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임
 - 기업은행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식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이 호전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0년에 주식매각을 취소하고, 2011년에 다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금년에도 주식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임.

<공공기관 주식매각 수입의 부실예산 편성사례>

단위 : 억원

구분	2010	2011	비고
합계	26,599	14,591	
인천국제공항공사	5,909	7,393	-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기업은행*	12,690	7,198	-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세외수입
대한주택보증(주)	8,000		- 국민주택기금

*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포함

- 정부는 국민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 추진, 최근에는 국민주 매각방침이 언급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국부 유출, 인천공항의 경쟁력 저하가 크게 우려
 됨

- 정부의 주식매각 이유로 외국의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3단계 확장공사 재원 마련을 들고 있으나 이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함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제서비스 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이고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훌륭한 기업으로 외국에서 벤치마킹 하려는 대상임, 외국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려면 외국의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3단계 확장공사(제2여객터미널 신축)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공사가 자체수익만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의 재정여건은 양호한 상태이며,
 - 특히 정부가 '10년, '11년 예산 모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매각 수입을 도로공사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어 3단계 확장공사 재원 마련을 위해 주식매각 하겠다는 것은 거짓으로 밝혀짐.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2010년 인천공항 지분매각(5,909억원) 지연으로 교통 도로계정 세입이 부족하여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 애로 발생
- 2011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의 개정지연시(인천공항 주식매각 지연시) 도로계정 세입부족(7,393억원)에 따라 일부 도로 사업의 공사 차질이 불가피

- 기획재정부는 “2010년의 세입호조 및 주가상승 가능성”을 이유로 기업은행 주식을 매각하지 않았음(2010년 기획재정부 결산 심사보고서)” 그런데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주식매각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임.

- 향후 공사의 주식가치 증가가 크게 예상됨에도 외국경영기법 도입 또는 서민재산증식 등을 내세워 임기중에 어떻게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을 매각하려고 발버둥치는 정부의 의도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또한 공사의 경쟁력 저하와 국부 유출을 가져올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주식매각을 연기해야 함.

(5) 1년만에 다시 증원으로 돌아선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전형적인 막무가내행정, 전시행정, 탁상행정

- 정부는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2009년에 공공기관의 정원을 크게 감축한 것으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127개 공공기관 정원 현황을 보면 '08년 17.2만명에서 '09년에 15.4만명으로 정원이 대폭 감축한 직후인 2010년부터 정원이 다시 증가하여 '11년에는 16.1만명에 이르고 있음.
- 2009년에서 2011년 동안 정원이 늘어난 공공기관은 127개 중 74개에 이르고 있음.

<127개 공공기관 정원수>

	2007	2008	2009	2010	2011
127개 공공기관 정원수(명)	172,419	172,512	153,553	156,975	160,941

출처: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 정원을 감축한 '09년 직후부터 다시 정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성과에 급급하여 각 공공기관의 신규사업 수요 등을 전혀 고려하

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원을 감축시킨 전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임

- 한국철도공사를 예로 들면 2009년에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였는데, 이는 철도공사가 KTX-II 신규도입, 고속차량 중수선 등 신규사업에 따라 2009년에 추가로 필요한 정원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채 결정되었음.
- 정부는 2010년에 한국철도공사의 신규사업이 늘어나자 신규고용을 조건부로 하여 정원을 201명 증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한국철도공사 정원현황 : ('07) 32,092 → ('08) 31,482 → ('09) 27,255 → ('10) 27,456 → ('11.6) 27,456

□ 정부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달성에 급급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한 막무가내 행정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결과임.

<한국철도공사 2009년 신규소요인력 내역>

사업연도	사 업 명	인원	비고
2009	중앙선 국수~용문 복선전철	88	'09년 한국철도공사 정원감축 5,115명에 신규소요인력이 전혀 반영되지 못함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5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인입철도	2	
	경부선 당정역 신설	9	
	경부선 서동탄역 신설	9	
	경의선 문산차량기지 건설	40	
	경의선 성산~문산 복선전철	266	
	KTX-II 신규도입(호남선 60량)	16	
	고속차량(KTX 등) 중수선	109	
	차량신규 도입·대체	82	
	안전 및 방재설비	7	
	장항선 TEC 운영	20	
	2009년 소계	653	

출처: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6) 효율성 명목으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인 공공성을 크게 훼손

- 공공기관의 존립근거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민에게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우선임. 그러나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제고에 중점을 두어 공공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다울 때 가장 경쟁력이 있음.
- 예를 들면 KTX의 잦은 고장 발생도 정부의 한국철도공사의 선진화정책과 관련 있음.
 - KTX가 운행되기 시작한 2004년이후 고장건수가 점차 감소 추세였지만, KTX-II가 신규운행된 2010년부터 사고건수가 늘어나고 있음.

<KTX 고장건수>

(단위 : 건수)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1~8
합계	81	50	50	28	27	23	53	51
KTX-I	81	50	50	28	27	23	25	22
KTX-II	-	-	-	-	-	-	28	29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KTX-II는 2010년부터 운행

- KTX의 특성 때문에 최근 고장발생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차량정비에 필요한 인원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공공기관 선진화란 이유로 실제 차량정비 인원은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임.
-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X-II 신규도입 및 고속차량(KTX 등) 중수선을 위해 '09년부터 '11년까지 422명 신규인력이 필요함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사의 정원 감축 계획에

따라 '12년까지 차량정비 인원을 1,203명 줄여야하며 '08년부터 현재까지 감원된 인원이 920명에 이르고 있음.

<KTX 중수선, 고속차량 신규도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신규 소요인력>
(단위 : 명)

	2009	2010	2011
합계	125	122	175
고속차량(KTX 등) 중수선	109	100	162
KTX-II 신규도입	16		
고속차량신규도입		22	13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분야별 정원상 감축목표 및 감원된 인원>
(단위 : 명)

	합계	차량정비	영업	운전	시설	전기	지원
정원상 감축목표	5,115	1,203	1,453	614	989	766	90
'09~'11.8 감원한 인원	3,612	920	1,119	494	564	515	-

출처 : 한국철도공사 제출자료

- 또한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를 내걸면서 한국철도공사가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 정비인원에게 필요한 정비교육 프로그램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정비관련 투자계획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음.
- 한국철도공사 정비팀은 단순부품교체 등 정기검사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열차 하체를 분리하는 고급검사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KTX 노후화에 대비하여 정비팀이 이를 이수하는 교육을 받았어야 했으나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결론

- 이명박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공공기관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기조하에 ‘08.8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으나, 그간 추진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외형적 성과창출과 효율성제고 명분에만 급급하다 보니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공공기관을 부실하게 만드는 공공기관 후진화정책이고 MB정부의 대표적인 실패정책인 것으로 들어났음.
- (낙하산인사 심각) 이명박정부가 임명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103명중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19명), 정치권(10명), 관료(40명)출신이 총 60명(103명 중 58%)에 달해 과거정부보다 소위 낙하산 인사가 훨씬 삼각한 것으로 드러났음.
-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크게 증가) 공공기관 선진화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을 절감”하겠다던 공언과는 달리 ‘공공기관 정부지원금이 ‘07년에 52조원이었던 것이 이명박정부 출범 2년만에 74조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금년에도 72조원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음.
- (무리한 통폐합으로 부채급증, 경쟁력약화)정부가 통폐합(36개→16개)시킨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07년 72조원에서 ‘10년에 130조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부채비율도 407%에서 1,144%로 크게 늘어나 재무상태가 크게 악화됨.
- (무모한 주식매각 추진으로 부실예산 편성, 경쟁력 약화, 국부유출 우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기업은행, 대한주택보증의

주식매각 수입을 '10년 예산에 2.7조원, '11년 예산에 1.5조원을 무리하게 편성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아 결국 부실예산편성을 자초 →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액 보전 목적

- 특히 정부는 외국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3단계 확장공사 재원마련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을 매각하겠다고 하나, 인천공항공사는 국제서비스평가 6년 연속 세계 1위이고 큰폭의 흑자를 내고 있어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임.
 - 정부는 주식매각 수입을 모두 도로공사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3단계 확장공사 재원에 쓰겠다는 발표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음.
 - 국민주 매각추진은 서민들 속이는 선거용 포퓰리즘.
- (획일적인 공공기관 정원감축은 막무가내행정,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 정부는 '09년에 공공기관의 정원을 크게 감축(173천명→153천명)하였으나, 다음해인 2010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여 '11년에 16만1천명으로 8천명 가까이 다시 증가하였음. 그 이유는 정원감축이라는 목표달성에 급급해 한치 앞의 신규수요도 내다보지 못하고 결정한 막무가내 행정의 결과임.
-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인 공공성을 크게 훼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이 효율성과 수익성에 치중하다보니 공공기관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
- KTX의 잦은 고장 발생이 대표적 사례임.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정원감축 계획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정비인원('09~'11년 동안 422명)이 확충되기는 커녕 정비분야 인원이 92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KTX의 잦은 고장이 공공기관 선진화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성과달성에 급급해 오히려 공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이명박정부가 실패한 대표적인 정책인 것으로 밝혀짐.

<첨부> 103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중 낙하산 인사 명단

1. 청와대 및 인수위, 대선캠프 출신 인사

연번	기관명	성명	임명일	주요경력
1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2011.07.17	대통령 대선 캠프 참여
2	한국도로공사	장석효	2011.06.15	대통령직인수위원회한반도대운하팀장
3	기술신용보증기금	김정국	2011.09.01	대통령비서실경제비서관
4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2009.05.27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5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철	2010.11.08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기획단장
6	국민체육진흥공단	정정택	2010.10.15	대통령캠프 참여
7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성준	2009.12.24	대통령 언론문화 특보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양유석	2011.04.22	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실비서관
9	중소기업진흥공단	송종호	2010.09.13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
1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2011.01.03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수석실 행정관
11	한국장학재단	이경숙	2009.05.07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12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혜경	2010.06.14	대통령실 국토해양비서관
13	축산물품질평가원	최형규	2010.03.04	대통령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14	국제방송교류재단	손지애	2011.08.01	청와대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
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2010.03.25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16	에너지관리공단	허중수	2011.08.24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17	한국광해관리공단	권혁인	2011.07.01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
18	한국석유관리원	강승철	2011.07.12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비서관
19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김남덕	2009.01.05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기능정책본부 부위원장
20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2009.03.19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
21	대한석탄공사	이강후	2010.04.26	제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전문위원

2. 정치권 출신 인사

연번	기관명	성명	임명일	주요경력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변정일	2009.05.08	10·14·15대 국회의원
2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2008.08.06	제16대 국회의원
3	한국마사회	김광원	2008.09.19	제15.16.17대 국회의원
4	한국방송광고공사	이원창	2011.07.14	제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5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2008.07.18	제15~17대 국회의원

연번	기관명	성명	임명일	주요경력
6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2009.04.16	17대 국회의원
7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2008.09.19	제15~17대 국회의원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경화	2011.07.01	17대 국회의원
9	한국가스안전공사	박환규	2008.11.19	18대 총선 청주-흥덕을 후보
10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2010.01.01	제17대 국회의원

3. 행정부 출신 인사

연번	기관명	성명	임명일	주요경력
1	인천항만공사	김춘선	2011.08.17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2	한국중부발전(주)	남인석	2010.01.25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3	한국감정원	권진봉	2011.01.05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실장
4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2010.07.12	고용노동부 이사관
5	국민연금공단	전광우	2009.12.02	금융위원회 위원장
6	도로교통공단	주상용	2011.04.27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7	한국고용정보원	정철균	2011.08.0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8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2011.06.30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종정	2011.08.09	국가보훈처 차장
10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2011.08.03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11	대한지적공사	김영호	2010.09.17	행정안전부 제1차관
12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원찬	2011.05.27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3	한국시설안전공단	김경수	2010.08.12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14	농림수산물유통정책지원원	유병린	2010.10.28	농림수산물부 통상정책관
15	수산자원사업단	양태선	2010.11.16	농림수산물부 유통정책단장/기획조정실장
16	축산물육성사업지원단	석희진	2009.10.20	농림수산물부 축산정책팀장
1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장옥주	2011.08.19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실장
18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2010.02.04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1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윤도근	2010.12.03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석우	2011.06.22	중소기업청장
21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이계순	2011.08.05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서울체신청 청장
2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경원	2009.08.24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본부장
23	한국디자인진흥원	김현태	2009.04.01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남궁민	2011.06.03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25	한국산업단지공단	조 석	2011.08.05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실장

연번	기관명	성명	임명일	주요경력
26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철곤	2011.06.01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27	한국전력거래소	염명천	2010.04.13	지식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단장
28	국립공원관리공단	어청수	2011.08.30	제14대 경찰청장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윤승준	2011.08.08	환경부 정책기획관, 물환경정책국장